

# 남북미 대화 원칙 확인 ·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

## 한미 정상회담 큰 성과

공동성명에 안보·경제 등 포괄적 협력 담야  
 “관문점 선언·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미  
 기존 합의 위에서 한반도 비핵화 노력” 재확인  
 한국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독립 기대  
 신기술·백신 공급·민간 우주 탐사 등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관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북미 정상 간 기존 합의 위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백신 생산을 증대하는 한미 관계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성 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2018년 관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 기반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는 문구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련,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미 정상은 한국군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원자력 사용 문제는 동맹으로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정상은 한미관계의 중요성 관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아세안 내 연계성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는 다자주의의 중요성 인식 차원에서 일본·인도·호주의 4국 협력체인 쿼드(Quad) 등 대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고,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또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한미 정상은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코백스(COVAX)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또 차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신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 핵심기술 수출통제와 관련한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투명하며 개방적인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 투자 증대를 촉진하고, 연구개발 협력을 통한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4월 기후정상회의의 주제를 통한 글로벌 기후 목표를 높이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0일 P4G 서울 정상회의의 주최로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한미 정상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기로 했다.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해 기술·혁신 분야에서 필수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또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비확산에 대한 기준을 보장하고,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뉴시스

## 농업용 로봇 개발·보급 촉진 근거 마련

민주 이원택 의원 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선원법' 이상 3건의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은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그 결과를 기본적으로 반영, 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선원법'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시신을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해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토록 했고,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해 선원들의 인권과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식생활교육지원법'도 통과됐다. /유호상 기자

##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금지 하천 수질 악화 해결

민주 윤준병 의원,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 2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8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의 금지·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사용을 고시로 금지하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오염부하가 약 27%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약 12.2조 원의 비

용 소요가 예상된다.

또한, 관로 막힘·악취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하수의 수질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추가 요금 부담이 없어 공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물 사용량을 증가시켜 정



부의 절수정책과 상충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도 역행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지난 4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오물분쇄기의 불법유통, 하수도·수질 영향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윤 의원은 “현재 고시로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 5·18 예우법·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5·18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 자매)에게 공법단체 회원자격 부여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2건

이와 함께 현재 5·18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공법단체 회원자격이 없는 방계가족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원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은 “법안 통과를 위해 5·18단체들과 17차례에 걸쳐 단합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남동행 의원인 성일종 의원(전 정부위 간사)과 이명수 의원(행안위)을 비롯한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아직 처리되지 못한 5·18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군산형 일자리 성공 위해 적극 지원”

우범기 정부부지사 명신 찾아 현장행정 4+1 추진방향 제시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성공적인 지역 안착을 위해 참여 기업과 소통 행정에 나섰다.

전북도는 (주)명신에서 우범기 정부부지사 주재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후속조치 현장 보고회'를 열고,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주)명신 박호석 부사장과 군산시 안창호 경제혁신국장, 군산대 김현철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주)명신의 생산 준비 현황을 둘러봤다.

이날 도는 협업체계 구축, 참여 기업의 조기 안착 지원과 이행방안 구체화·실행, 전기차 산업 육성에 더해 이행상황 점검이라는 4+1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군산형 일자리의 조기 안착과 함께, 본격적인 확산세를 펼쳐달라는 복언이다.

먼저, 도는 참여 기업의 조기 안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원계획 구체화하고 애로사항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계획 구체화, 추가 인센티브 발굴·지원,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은



전북도는 (주)명신에서 우범기 정부부지사 주재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후속조치 현장 보고회'를 열고,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사용료 등 감경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사진)의 원이 제38회 임시회에서 '전북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성경찬 의원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제한지역 등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30%~10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용료·대부료를 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하던 것이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성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고, 24일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전주시의회 문화도시연구회, 역사문화 학술 세미나

전주시의회 연구단체인 '문화도시연구회'가 지난 21일 전주역사문화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전주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나종우 전주문화원장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전주의 역사와 문화, 지명의 유래 주요 유적과 유물 등에 대한 의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의원들은 나 원장의 강연에 이어 전

주단오의 흥취와 보화반물관 건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지정 필요성 등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향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도시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덕(더불어민주당 삼천1·2·3동) 의원은 “연구회 설립 후 첫 세미나를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천년고도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고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서 기자